

# 데스크시각

기현호



올 가을 한국 산업계의 가장 큰 이벤트는 대우조선 인수전(戰)이다. 매각 가격이 무려 최고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LG카드가 7조2천억원, 대우건설이 6조5천억원이었으니가 최근 인수합병(M&A)시장이 나뉘던 때를 가늠해 가장 몸값이 비싼 대우다. 최대의 먹잇감에 대한민국 굴지의 4개 기업이 달려들었는데 사활을 건 경쟁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시장은 잔인한 공간

전장(戰場)에는 항상 해당기업이나 관련 기업들간 상호비방과 괴담이 나온다. 이번에도 그럴싸한 얘기가 떠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수전에 참여한 어느 기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다. 사들여 봐야 큰 시너지 효과도 없는 그 기업은 단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에 견제하기 위해 끼어들었다는 설이다. 입찰이 치열해지면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때 발을 빼면 인수기업은 미처 촉매도 들기 전에 재정

부담으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게 요지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직 약육강식만이 진리처럼 존재하는 시장은 늘 그렇기 때문이다. 시장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잔인한 공간이다.

## 중견기업을 키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2년 내에 2천개의 기업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비무장상태로 이처럼 험한 시장에 떠밀려 나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2천여개 업체를 이른바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해택만 보려는, 누익만 중소기업인 업체를 분류해 남은 세수를 중소기업 지원에 돌린다는 취지인데 바람직한 조치다. 문제는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2천여개 기업, 또 이미 상급단계로 진입해 한창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형성장을 하지 않고, 회사를 쪼개고, 상시 근로자수를 넘지 않으려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지 먼저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각종 혜택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중소기업들은 거대기업과 경쟁해야 할 시장이 두렵기만 하다. 대기업들이 자신들처럼 약한 기업에 그들의 영역을 내주는 것은 커녕 약자를 참혹하게 짓밟아 버리는 시장의 행태를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전남지역의 한 유망 제조업체는 최근 금융권의

돈줄이 막혀 허덕이고 있다. 엄청난 금액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고도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 지역경제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계 배후조종자가 동종의 대형 업체라고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 회사처럼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못되는 기업이 4천~5천개에 이르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법적 이름이 없다. 다만 업계나 학계에서는 편의상 중견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허허벌판에 내몰려 있지만 중견기업의 위치는

한국산업의 허리에 해당한다. 한국경제를 튼튼하게 바쳐줄 힘의 원천이다.

## 대기업과 차별화된 지원해야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기업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중견기업을 선별,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규제완화나 조세경감 등을 법제화하고 각종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어린이라면 중견기업은 엄청난 열량 섭취가 필요한 성장기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때문에 왕성한 식욕에 맞는 충분한 영양분, 즉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줘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적게는 100개에서 500개에 이르는 지역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기업을 일구고 있는 지역밀착 기업들이다. 중견기업 육성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돼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

덧붙여 정부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저지르고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반칙까지 철저히 가려내 뿌리 뽑아야 한다. 중견기업의 성장이 지역과 국가경제의 미래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 시설

### 반 총장, 여수엑스포 '적극 지원' 기대 크다

2012년 여수엑스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반 총장은 옛그제 스페인 사라고사박람회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찾아 "여수엑스포는 한국과 여수만의 발전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영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유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포 성공 개최에 정신평화 아닐 수 없다.

여수엑스포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인류의 공통과제다. 유엔을 비롯 국제사회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산화탄소 절감 등에는 국가의 이익을 내세워 소극적이다. 유엔이 앞장서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다. 여수가 '재수' 끝에 엑스포 개최로 결정된 것도 시의적절한 주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여수엑스포는 국제사회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조직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여수 선언'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수면 상승 대책을 담은 '여수 프로젝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을 환경보호 선도국으로 각인시키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여수엑스포 개최효과에 매우 크다. 행사기간 세계 100여 나라 43만여명, 포함해 800만명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유발효과 10조 204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원, 고용유발효과 9만여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엔까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마당에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다. 여수엑스포까지는 4년도 채 남지 않았다. 친환경 주제를 살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려면 정부와 기업, 자치단체 등 온 국민의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수엑스포가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방' 현실 외면한 '9·1 세계 개편안'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과 지역, 계층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수도권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대 표적이다.

지방의 불만도 높다. 우선 지방에서 요구하는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광주, 부산, 대구 등 광역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건의했고, 전남도와 전북도 등 세원이 부족한 도 지역에선 지방교부세를 인상을 역설해왔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원의 적정 분배를 통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개편안은 '지방'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1가구 1주

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형성이란 목적과 반대되는 효과가 우려된다. 양도세 감감 기준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인하됐지만, 지방의 1가구 주택자비과세 요건은 '3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됐다. 세율 인하를 제한하면 혜택이 수도권에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 분양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됐다고 걱정이 크다. 거주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말 주택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지방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특히 국회는 세계개편안 심의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녹색별장장 양길승 박사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는 저서에서 아일랜드 유학시절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저 녀석간 지방지의 한철 관련 광고를 보고 인근 초등학교를 찾았다. 초등학교는 한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시간을 이뤘고, 2시간을 기다려야 한철을 할 수 있었다. 양 박사는 한철차 옆을 지날 때면 어깨를 두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예를 쓰는 우리

나라의 모습이 떠올라 씁쓰레함을 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겨울방학 때면 의례 혈액 부족 사태를 겪는다. 한철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O형과 A

O형과 A형은 재고가 각각 1.7일분과 1.9일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적절히 분화시켜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어떤 혈액형에도 수혈이 가능한 '안전한 피', 속칭 '만능 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줄기세포연구전문 기업인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ACT)는 최근 배아줄기세포를 핵(核)이 없고 완전한 산소운반 기능을 가진 적혈구로 분화시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혈액형에 관계없이 어떤 환자에게나 안전

하게 수혈할 수 있는 제로-네거티브형의 경우 가장 많은 부족 현상을 보여 의료기관마다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현재 혈액 재고량이 이를분도 안돼 전국 16개 혈액원 등을 통해 수혈용 혈액 부족에 따른 체혈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혈액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적혈구 농축액이 1.7일분, 혈소판 농축액은 1.4일분에 불과하다. 특히

## 인공 혈액



## 은펜칼럼

강대석



주말 드라마 '대왕 세종'을 자주 보게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무렵 방영돼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데다 인제부터가 TV뉴스가 정치·경제적으로 흥미가 없어져 자연스럽게 드라마 채널로 리모컨이 간다.

드라마 대왕 세종은 누구나 다 아는 소재이다. 굳이 시청을 안 해도 대략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세종의 리더십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데 있다.

그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다. 그야말로 백성 한사람 한사람이 그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드라마 대왕 세종을 보면 작금의 우리의 현실과 맞물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 진실하기 때문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 역시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밑바탕엔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시책들이 눈에 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천일염 산업화, 신재

## 드라마 '대왕 세종'과 지방자치

에너지 사업 등이 그것이다. 우선 친환경 농업은 처음에는 농민들조차 부정적이던 시책이었지만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남 농업의 30%를 차지하는 미래농업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천일염 산업화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소금에 밀려 우리소금 산업은 사양길에서 허덕였으나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광물로 분류되던 소금을 식품으로 법을 바꾸고 산업화에 노력한 결과 소금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전남도가 일찌감치 고부가가치에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이끌어 갔으므로써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지역의 미래를 여는 청사진으로 이어졌을 전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생 에너지 사업 등이 그것이다. 우선 친환경 농업은 처음에는 농민들조차 부정적이던 시책이었지만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남 농업의 30%를 차지하는 미래농업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천일염 산업화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소금에 밀려 우리소금 산업은 사양길에서 허덕였으나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광물로 분류되던 소금을 식품으로 법을 바꾸고 산업화에 노력한 결과 소금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전남도가 일찌감치 고부가가치에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이끌어 갔으므로써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지역의 미래를 여는 청사진으로 이어졌을 전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생 에너지 사업 등이 그것이다. 우선 친환경 농업은 처음에는 농민들조차 부정적이던 시책이었지만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남 농업의 30%를 차지하는 미래농업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천일염 산업화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소금에 밀려 우리소금 산업은 사양길에서 허덕였으나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광물로 분류되던 소금을 식품으로 법을 바꾸고 산업화에 노력한 결과 소금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잘 보이게 글씨 키워야

며칠 전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농산물에 붙이는 스티커에 품명은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원산지는 너무 작아 찾기 어려웠다. 보물찾기하듯 해서 확인했더니 칠레산이었다. 과일가게 주인에게 어느 나라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거 국산 아냐, 거기 써있을 거예요"라며 얼버무렸다.

수입 과일지와 제주소산 한라봉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별 생각없이 구입할 경우 수

입 과일을 국내산으로 오인해 사기 십상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을 진열할 때도 품명과 가격은 컸지만 원산지 표시 부분이 잘 보이게 표시하면서도 원산지 표시 부분은 물론 속에 가린다. 어떤 때는 상품의 상자 위에 놓고 판매한다며 아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잘 보이도록 크기를 키워주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정동

## 기 고

이창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누구나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1차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제도가 가동되어오다가 다섯 번째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에 들어가

이로 인해 소규모 학원·단체·대학부설 교육원 등이 앓다 뒤 교육기관으로 신고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 또 요양보호사가 되면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교육기관만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해 온 사회복지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별도 취득해야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되도록 해 기존 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

## 요양보호사 양성 기준 강화해야

면서 차세대 중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나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 숙련된 인력지원 확보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및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 2의 규정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춰 사·도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수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과 교원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로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2주 내지 8주 정도의 교육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

반면 최근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부 재가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에는 비정규직이거나 시급 단기간 근로로 월 60만원 정도의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다.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조건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실용 기술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뒤야 한다. 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수발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가족력이나 질병 등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 신뢰감을 줘야 한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영대학 노인사회복지과 겸임교수>

## 자동차 불법개조 인명사고 불러

납편이 캔터를 하고 있다. 일이 바쁠 때는 필자도 캔터에서 일을 돕는다. 캔터에서 전화를 받다보면 차를 불법개조하려는 사람들의 문의전화도 많이 걸려온다.

요즘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자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해 줄 수 없다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차에 대해서 잘 몰라 처음에는 당연히 되는 것인줄 알고 상담을 했다가 남편한테 혼나 뒤에는 딱 잘라 '안된다'고 얘기한다.

경유를 LPG가스로 교체하면 휘발유 차량보다 엔진에도 좋고 친환경적이라 정부에서 화물차 쪽에는 개조를 허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개조비용이 차그만치 450

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여보고자 캔터에서 값싼 중고 부품을 사용해서 개조해 달라고 요구한다.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중고 부품은 50만~100만원 정도이니 운전자들이 입맛을 당기는 것이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불법이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한 뒤 남편에게 물었더니 저렴하게 LPG 불법 개조를 했는데 가스배관이 너무 심해서 고쳐달라고 들어오는 차도 있다며 황당해 했다. 이런 불법개조는 삼가야 한다. 다른 것과 달리 불법개조는 자칫 가스폭발의 위험이 높아 인명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용승·광주시 서구 벽진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8 <F A X 222-426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 1부 400원	
사건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